북핵 확장억제 방안, 美핵잠함 상시 배치 핵 공유 검토

핵무장 추진 정치적 부담 커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 파장 고려
한미 양국 당국자 물밑 협의 중
윤 대통령 "가능성 따져보고 있다"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핵탄두 탑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실은 미국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나 항공모함 전단을 영해 인근 공해에 상시 순환 배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내외 반발을 고려해 기존의 '한반도 비핵화' 방침을 고수하되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검토할 수 있는 절충적 선택지라는 점에서다. '실질적 핵 공유'로 불리는 이 방안은 궁극적으로 미국 측이 역내 안보전략 차원에서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로, 현재 한미 양국 간 물밑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핵 공유와 관련, "국내와 미국 조야에서 확장억제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걸 잘 경청하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틀전 출근길 문답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비교할 때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한발 더 나아간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북한이 실제 핵실험을 한다면 어떻게 대응할지 옵션들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데, 핵 공유도 그 리스트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실질적 핵 공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검토할 수 있는 옵션 중 하나"라며 "그만큼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핵무력 정책 법제화와 잇단 도발로 핵 협상의 새판짜기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판단,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검토해왔다.

다만, 새 정부 출범 후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한 '담대한 구상'을 제시한 상황에서 뒤늦게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무장을 추진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30년 넘게 대북 정책의 근간이 돼온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사실상 파기하는 데 따른 외교적 파장도 함께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자체 핵 개발은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 내에서 사실상 불가능하고, 전술핵 재배치도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런 옵션들은 우리의 기존 입장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 미국과의 핵 공유에 의견을 같이 하고, 핵탄두 탑재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 배치가 가능하다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최선의 카드가 될 수도 있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학계에서는 이밖에 미국의 핵탄두 SLBM을 한국 잠수함에 공유받는 방안, 미국의 핵탄두를 한국 SLBM과 잠수함에 공유받는 방안 등 SLBM과 잠수함을 활용한 핵 공유 아이디어가 제시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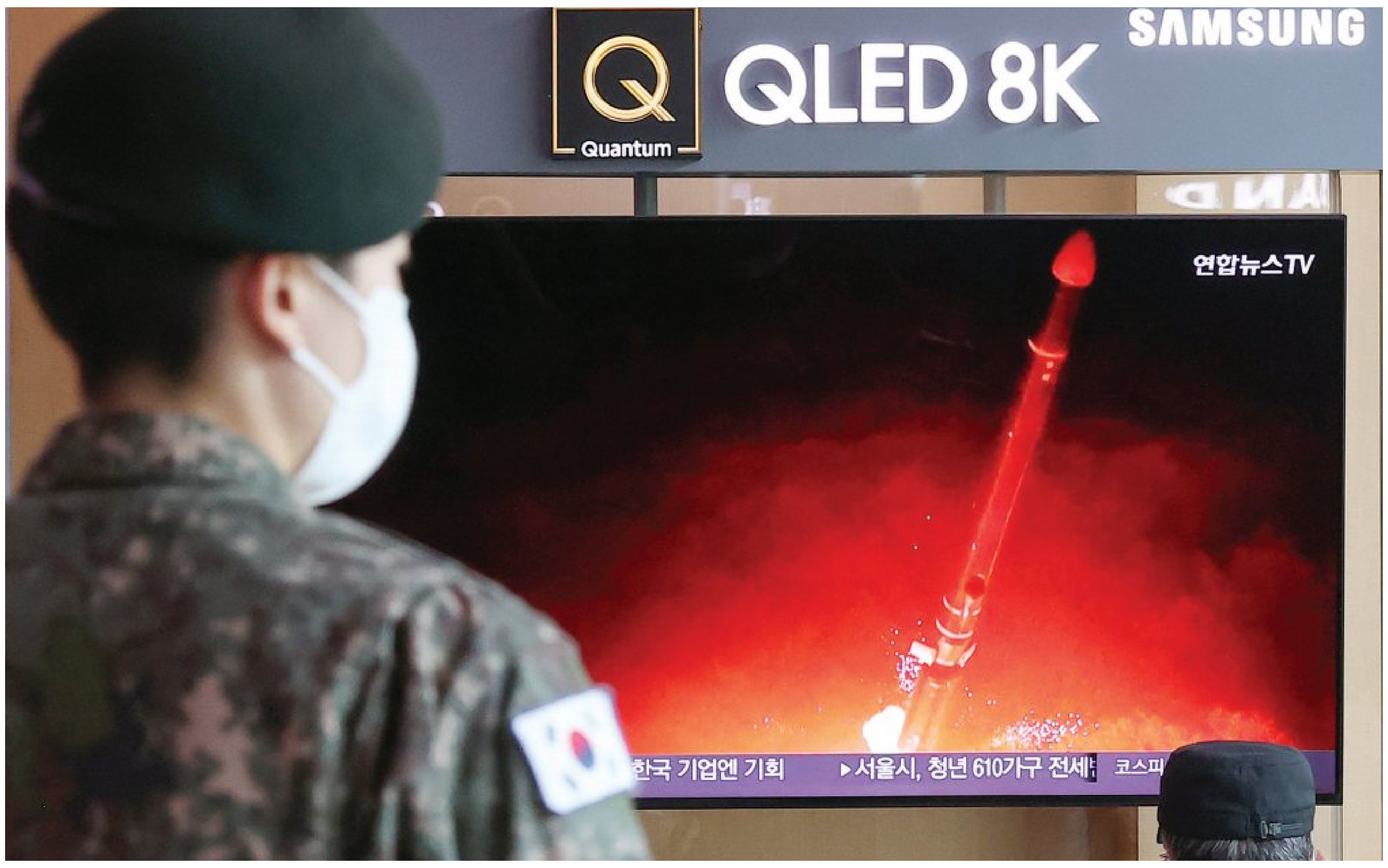
미국의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활용하는 확장억제 강화 방안은 윤석열 정부 초반부터 유력한 카드로 거론돼 왔다.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적시에 핵 잠수함 등 전력들이 한반도에 전개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선 전략폭격기의 국내 주둔 방안도 거론하지만, 이는 별도의 운용병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점에서 미군측 동의를 얻기 어렵지 않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미측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안보 당국 관계자는 통화에서 "미국 측과의 협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북한이 9개월 만에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공개 보도한 13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술핵운용부대에 배치된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 2발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정무위 국감 권익위원장 거취 놓고 날선 공방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13일 국정감사에서는 그간 논란이 된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전 위원장이 정권 교체 뒤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체를 비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정권이 국민의 심판을 받아 교체되면 정무직은 다 나가야 한다"라며 "정무직 공무원은 신분 보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승재 의원은 "임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유력 정치인의 뜀틀로 사용한다는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정치적으로 유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소신을 밝히는 건 어떤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치인 출신 전 위원장이 향후 정치적 행보를 염두에 두고 현 정권과 맞서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권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등이 도가 지나치다며 전 위원장을 엄호했다.

황운하 의원은 "(감사원 감사는) 전 위원장을 사퇴시키려는 표적 감사"라며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박정희 정권의 차지철이 연상된다"라고 말했다.

강병원 의원은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최재해 감사원장의 국회 발언을 고리로 전 위원장에게 힘을 실었다.

강 의원은 "최 원장은 기관장으로서 법에 부여한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은데도 임기를 보장받는다"라고 비꼰 뒤 전 위원장에게 임기 보장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대통령의 하명 지시를 받들고 돌격대 역할을 해야 전 정부 인사라고 탄압을 받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

尹 대통령 "금리인상 고통…도산 없도록 적절한 신용정책 만들겠다"

"실물경제 관리 최선 다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금리 인상에 따라 주택담보부 채무자라든지 가계·기업의 재무적 고통이 늘었다"며 "이 분들이 부실화되거나 도산하는 일 없도록 정부가 적절한 신용정책을 잘 만들어서 관리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모두발언을 통해 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잇따른 금리인상으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0.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한 것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많은 국민께서, 또 기업인들이 금융시장 변동성과 실물경제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하는 게 사실"이라며 "위기는 과장돼서도 안 되고 방치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늘 거기에 알맞은 파악과 관리가 필요하고, 정부가 실물경제를 탄탄하게 관리해나가고 우리의 보유외환이 불필요한데 나가지 않도록 잘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주 경제장관회의도 그런 차원에서 이뤄졌는데, 앞으로도 이런 실물경제 추진전략 점검회의를 대통령 주재로 직접 자주 해나갈 생각"이라며 "국민께서는 위기라고 하는 분위기에 너무 위축되지 말고 필요한 지출이나 소비, 기업의 투자 행위를 정상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 입주 시기'를 묻자 "그건 중요한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라며 "어느 정도 안전장치가 다 된 거 같아서 이사 준비를 해야 하는데 워낙 바쁘고 해서…"라고 답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당 수습 나선 국힘…TK서 전국 순회 첫 회의

정진석 "박정희·TK 우리당 뿌리"

'이준석 리스크'를 털어낸 국민의힘 지도부가 13일 당 수습 작업에 시동을 걸고 나섰다.

그 한 갈래는 지역 방문을 통한 지지층 결집이고, 다른 한 갈래는 당 내부 정비 박차다.

비대위는 이날 첫 전국 순회 현장 회의의 스타트를 당의 핵심 지지기반인 대구·경북(TK)에서 끊었다.

정 위원장은 오전 대구시당에서 열린 현장 비대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국민과 당원은 국민의힘을 믿고 맡겨줬지만, 내부 혼란으로 부족한 모습을 보여드린 게 사실"이라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위기마다 대구·경북은 우리 당이 기사회생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였다. 우리 손을 뿌리친 적이 없었다"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정 위원장은 앞서 대구행 기차 안에서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도 박정희 전 대통령과 TK를 동시에 언급, "우리 당의 뿌리"라고 강조했다.

회의장에는 TK 지역구 의원들도 총출동했다. 비대위는 지역 숙원사업인 TK 통합 신공항 건설 등 공약 이행을 약속했다.

비대위는 두 번째 지역 순회지로 오는 20일 충남을 찾는다. 충남은 정 위원장의 지역구인 공주·부여·청양이 있는 곳이다. 이어 인천 등을 방문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이달 말 조강특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내달 초 전국 단위 당무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